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결정요인

: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 태 완**

서 재 권***

국문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적’ 상황 하,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환경적 요인에 주목하여 한국사회가 맞이하게 될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 방안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대유사체계 연구설계의 논리에 근거해 부산 강서구 지역을 선택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태도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1) 2·3차 산업에 기반한 지역일수록, 2) 산업구조를 2·3차형으로 변화시키거나 이주민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는 지역일수록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주민에 대해 보다 포용적이고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 상호의존성이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에 필수적이며, 상호의존성이 발생하는 데에는 산업구조와 도시개발계획 등의 지역 특성이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주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이주민의 기능과 역량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제도·환경적 요소를 구비하기 위한 이주민 정책을 제안한다.

주제어: 이주민, 다문화 사회, 지역개발계획, 지역산업구조, 부산 강서구

I. 들어가며

1990년대 들어 소수의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 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른바 ‘다문화’에 관한 논의들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본격화되어 20년이 채 되기 전인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반 대중의 관심사로 자리매김한다. 같은 시기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증대시킨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이주민의 급속한 증가는 ‘다문화’ 시대를 준비해야 할 책무를 단지 전문가 및 정책결정자의 몫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일반 시민의 몫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2014 동계 영호남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4492).

** 제1저자,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다문화’ 관련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국내에 유입된 이주민을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로 파악하여 이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운선 2007; 고유미 외 2009; 정자경 외 2012). 이러한 논의는 이주민의 주요 유형인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 조사와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로,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하여 ‘다문화적’ 상황의 수용 정도¹⁾를 파악하고, 그 수용 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룬다(양계민 외 2008; 윤인진 외 2011; 이현정 외 2013; 오영삼 외 2014). 특히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 정도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단순히 수용 정도의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독립변수를 찾는 인과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과학적 처방에도 관심을 갖는다.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두 가지 범주의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연구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두 번째 범주의 논의가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다문화 관련 논의에 있어서 지역주민은 이주자에 대해 사회적인 ‘갑’으로 간주되어 그들이 겪고 있는 갈등체감의 정도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주민은 이주를 실행하기 전에 이미 이주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나, 이주로 인해 생겨날 편익과 비용을 인지하는 반면, 이주민과 무관한 대다수의 지역주민은 그러한 정보나 인지를 사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관련 정책의 주도권은 내국인이나 지역주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각각의 의회는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지원능력과 범위를 한정하는 예산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주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 의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이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지지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지지나 여론은 지역주민이 가지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나 인식의 변화 없이는 문제로서 대두되는 ‘다문화적’ 상황을 해결하거나, 이주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실행에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적’ 상황과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주목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그러한 태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이론적 시각 중, 상호관계를 통한 집단 간 태도의 변화에 주목한 접촉이론의 시각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의 태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조건을 찾아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1) 민무숙 외(2010)의 연구 이후, ‘다문화수용성’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다.

이후 다음 절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연구가설을 수립한다. 3절에서는 의사소통법의 하나인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조사를 통해 검증을 위한 자료를 수집, 측정하고, 4절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며, 마지막 5절에서는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정리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주요 개념의 정의

본 연구는 이주민과 그들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김혜순 외(2014)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와 관련된 국내 학계의 논의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논문에 사용될 용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인주민 대 이주민. 한국은 이민(immigration)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민자는 없다. 이주민이란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을 ‘등록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정의에 의하면 이들은 ‘90일 이상 거주자인’인 상주인구에 포함된다. 다시 안전행 정부는 상주인구를 ‘주민’과 ‘외국인주민’으로 구분하는데, 구분의 기준은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는가 여부이다. 즉, 주민은 한국국적을 가진 상주인구이고, 외국인주민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주인구인 셈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주민의 범위는 안전행정부가 정의하는 외국인주민보다는 광의의 범주로 파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귀화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와 ‘다문화가정자녀’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적’ 상황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다문화적’ 상황을 발생시키는 모든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주민은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한 귀화자(혼인귀화 및 기타),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근로자), 결혼이주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및 그들의 자녀를 포함하며,²⁾ 이들을 제외한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을 지역주민으로 지칭한다.

둘째, 다문화수용성 대 이주민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주의’ 등에 대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용어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아니기에 간략히 언급

2) 이주민에는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자면, 연구자는 한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시되는 것으로 지칭되는 이른바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에 관련된 정책일 뿐(김혜순 2014, 303-304),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구사회 특히 유럽에서 제시된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이민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문화와 수용국의 국민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이민자들이 어떤 문화를 선택하든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차별적 배제(수용), 동화 등과 같이 외국인 또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 노선의 한 갈래일 뿐,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도 볼 수 없으며,³⁾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으로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본 연구가 지칭하는 ‘다문화적’ 상황이라 함은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다양성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다변화 현상이 진행되고, 중국에는 인종, 언어, 종교, 기타 생활양식 등을 포괄하는 문화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수용성’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하는 현상이 반드시 이주민에 의하지만은 않기 때문에,⁴⁾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기 위해 단순히 ‘이주민에 대한 태도’로 표현하기로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이주민(또는 소수자집단)에 대한 지역주민(또는 다수자집단)의 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이론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 그 하나는 특정 집단(사회)에 속한 개인이 다른 집단(사회)과의 관계에 있어 편견(prejudice)과 차별(discrimination)의 태도를 가지는 원인을 규명하는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 다른 하나는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다.

블레이크(Blalock 1967)은 소수집단의 출현으로 다수집단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이러한 위협의 증가가 가시화되면 해당 소수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집단위협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연구로 킬리언(Quilian 1995)이 유럽 12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이민자들의 증대가 한정된 자원에 대한 배분경쟁을 부추겼고 이로 인해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유로바로미터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밝혔다. 백인사회가 흑인을 경제적 자원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그들이 견지하는 흑인에 대한 징벌적 태도(punitive attitude)간에 긴밀한 상관성이 존재함을 입증한 킹 외(King et al. 2007)의 연구, 백인이 가지는 흑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히스패닉의 이민이 증가하면서 히스패닉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옮겨가고 있음을 주장한 마커트(Markert 2010)의 연구 등은 집단위협이론을 미국사회에 적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타즈펠 외(Tajfel et al. 1979)는 개인이 소속 집단에 대해 느끼는 정체성은 자부심이나 존경 등에 의해 강화되며, 이러한 집단(사회)정체성은 내집단(우리, in-group)과 외집단(그들,

3) 다문화주의에 의한 문제는 차이를 인정받고 선택을 존중받은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융화하려는 노력을 피하기보다 그들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립하여 분열되고 있다는 유럽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자세한 사례는 버토백과 베센도르프(Vertovec and Wessendorf eds. 2010)를 참조할 것.

4) 한국인 간에도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하거나, 문화적 차이에 의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호남 간의 지역주의 문제, 종교적 갈등, 소위 ‘군사문화’와 같은 각종 회사나 조직 간 문화적 차이, 세대 간의 갈등 등은 이주민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상황을 나타낸다.

out-group)의 범주화를 통해 소속집단을 사회적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이 사회정체성 이론의 핵심은 한 집단에 속한 개인이 다른 집단의 부정적인 양상을 찾아냄으로써 소속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속집단에 대한 정체성과 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주장이다.

네덜란드 사례를 분석한 스나이더만 외(Sniderman et al. 2004)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보다 국민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이민자에 대한 배제적인 태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호크만 외(Hochman et al. 2008)와 할리 외(Holley et al. 2009)의 이론적 틀에 맞춰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강한 종족적 유대감과 시민적 의식을 보인 혼합형 집단이 외국인에 대해 가장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밝힌 윤인진 외(2011)의 연구,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민족정체성이 종족배제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양계민 외(2008)와 양계민(2009)의 연구 등이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집단위협이론과 사회정체성 이론이 상호 대안가설로서 경쟁하는 관계라면, 이와는 아주 다른 각도에서 소수자집단에 대한 다수자집단의 태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어왔다. 우선 개인과 집단이 가지는 특정 가치관에 따라 문화적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민무숙 외(2010)와 안상수 외(2012)는 베리(Berry 1997, 2005)의 문화적응 모형(acculturation model)⁵⁾에 입각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 정도가 높고, 집단 간 관계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이주민(소수집단)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편적 권리와 시민의식(citizenship)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해 보다 관용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현(2007)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관심과 바람직한 덕성으로서의 시민의식,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과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황정미(2010)는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의미하는 시민성이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수용과 이주민을 집합적 위협으로 인지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접촉이론(contact theory)에 근거한 연구도 있다. 서로 다른 집단 간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발생함으로써, 타집단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어 갈등을 극복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⁶⁾ 김혜숙 외(2011)와 안상수 외(2012)는 외국인 접촉 경험이나 빈도, 해외거주 경험 등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현정 외(2013)는 이주민들과 관련된 대중매체의 콘텐츠 시청 경험(양)이 간접적인 접촉의 효과를 넘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5) 베리는 자문화나 타문화에 대한 태도와 자기집단과 타집단 간의 관계 형성에 대한 관심에 따라 구분된 4개의 적응전략(소수자집단과 다수자집단의 전략은 구분됨)을 제시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소수자 집단 중 다수자집단과 관계 형성을 원하는 집단은 통합(integration)을, 관계 형성을 원하지 않는 집단은 분리(separation)나 격리(segregation)를 선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소수자집단 중 관계 형성을 원하는 집단은 동화(assimilation)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주변화(mirginalization)를 각각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Berry 1997, 9-11). 또한, 다수자집단의 경우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격리(segregation), 용광로 모델(melting pot), 배제(exclusion)를 각각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Berry 2005, 704-707).

6) 알포트(Allport 1993)는 접촉이론이 예견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위해선 집단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하고,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하며, 집단 간 협동과 권위 지원(authority support)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표 1〉 집단 간 태도에 관한 이론적 시각 정리

구분	목적	핵심내용	사례
집단위협 이론	집단 간 편견과 차별에 대한 원인을 규명	소수집단으로 인한 현실적 위협의 가시화로 다수집단의 적대적 태도 발생	Blalock(1967), Quillian(1995), King and Wheelock(2007), Markert(2010)
사회정체성 이론		소속집단에 대한 정체성과 타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관련성	Tajfel and Turner(1979), Sniderman et al.(2004), Hochman et al.(2008), Holley and Vicki(2009), 윤인진 외(2011), 양계민 외(2008), 양계민(2009)
문화적응 모형	특정 가치관에 따른 집단 간 태도의 차이를 비교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태도, 집단 간 관계 형성에 대한 관심 등에 따른 집단적응 전략	Berry(1997, 2005), 민무숙 외(2010), 안상수 외(2012)
보편적 권리와 시민의식		보편적 인권에 대한 관심, 시민적 덕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차이	최현(2007), 황정미(2010)
접촉 이론	집단 간 태도의 변화를 설명	집단 간 긍정적 상호작용과 접촉의 경험에 따른 편견적 태도의 감소와 갈등 극복	Allport(1993), 김혜숙 외(2011), 안상수 외(2012), 이현정 외(2013)

이상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공통의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실태파악 후에 따라야 할 실천적·처방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그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감, 종족배제주의, 편견과 고정관념 등을 측정하고, 집합적 위협인지의 정도, 국민 또는 민족정체성,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타집단에 대한 관계성, 보편적 인권이나 시민의식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이들 모두를 고려한 ‘점수’가 보다 적절하고 확실한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학문적 기여는 무시할 수 없다.7) 하지만, 지역주민의 태도를 변화(주로 소수집단과 이주민에 대해 호의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의 제시는 지수화 노력만으론 이루어질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던 대안들은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게 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거의 모든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경험자가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주장된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대안은 일견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투여될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7) 또한, 이후의 연구에 동일한 지표나 설문문항을 이용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대상이 상이한 연구결과와의 비교가 용이하며, 누적된 자료를 이용한 종단연구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지수(index)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3. 연구전략과 가설의 설정

비록 개인에 대한 제도의 결정력에 주목한 제도론적 시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태도나 행위가 개인이 처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개인이 처한 외부 환경에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여 이들 간에 태도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한 환경적 요인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의 특성이다. 김혜순(2008)은 이주민이 지역주민보다 더 지역 밀착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를 근거로 김혜순 외는 이주민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이유와 해당 지역 지역주민이 갖는 이들에 대한 태도를 감안한 지역 맞춤형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김혜순 외 2014, 91).⁸⁾

아울러 거주지역에 주목하는 추가적인 이유로는 본 연구의 연구전략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분석수준의 하향화를 통해 보다 미시적인 설명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국민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불수불가결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이주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는 단위가 일선 자치구·군 수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적 사무와 구분되는 자치적 사무에 대한 정책제안의 근거를 분석수준의 하향화를 통해 찾으려 한다.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 중, 첫째, 지역의 산업구조에 주목한다. 현재 한국의 이주민 중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는 사람은 외국인노동자로, 전체 1,569,470명의 이주민 중 약 34.3%에 해당하는 538,587명이 거주하고 있다(2014년 7월 안전행정부 발표 기준).⁹⁾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의 외국인노동자 수는 국내 산업의 노동수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역의 산업구조 상 외국인노동자의 수요가 있는 곳에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순히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는 이유는 거주 편의성 등의 이유로 이른바 ‘게토(ghetto)화’되어 있는 이주민 밀집거주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주민 밀집거주지역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무관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고려하는 지역의 특성은 지역의 개발계획이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지역의 특성은 향후 개발계획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산업단지나 대규모 베드타운의 형성 등과 같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국제신도시나 관광단지의 조성 등과 같은 개발계획에 따라 이주민의 유입이 늘어나거나, 이주민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주목하는 또 다른 요인은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이주민의 필요성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거주지역에 이주민의 유

8)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관련 연구들이 최근에 보고되었는데,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준혁 외(2012)의 연구, 서울의 30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외국인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한 노성훈(2013)의 연구,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대상으로 한 김혜순 외(2014)의 연구, 서울의 자치구를 외국인 거주비율에 의해 구분 한 오영삼 외(2014)의 연구 등이 있다. 아쉽게도 이들 연구에서도 지역의 특성은 영향요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9) 안전행정부 홈페이지(2014. 7. 2.),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http://www.mospa.go.kr/fi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Id=42492, 검색일 2014. 10. 10.).

입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느끼거나, 개발계획에 있어서 이주민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될 경우와 반대의 경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가설 1> 지역주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가설 2> 지역주민이 느끼는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이 클수록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가설 3>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개발계획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교육과 관련한 연구가설을 가장 먼저 제시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발생했고, 또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일수록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설 1>의 내용이 채택된다면, 본 연구에서 진행된 조사결과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관련해 일종의 준거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2>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가설 3>의 내용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개발계획에 의해 추가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산업구조와 관련해서 농업, 어업 등의 1차 산업이 기반인 지역과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기반 지역, 그리고 판매,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 기반 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산업은 휴농기나 휴어기 등이 실제로 존재하여, 1차 산업 기반 지역은 노동 수요가 상시적이지 않아 다른 산업 기반 지역에 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3차 산업은 소비자 우선의 산업인 만큼, 대상에 대해 지역주민·이주민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인구의 증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주민 전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이 추가될 수 있다.

<가설 3-1> 2·3차 산업 기반 지역은 1차 산업 기반 지역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가 긍정적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개발계획과 관련될 경우, 지역의 산업구조가 변경되는 즉, 1차 산업 기반에서 2·3차 산업 기반으로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이주민이나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즉, 지역에 국제신도시나 관광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시행중이거나, 수립된 지역 등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나, 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면 아래와 같이 가설이 추가될 수 있다.

<가설 3-2> 이주민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시행되거나, 수립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Ⅲ. 자료의 수집과 측정

1. 조사 설계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대인조사 즉, 서베이(survey)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구성한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수집하여, 가공한 후 채택되었으며, 해당 문항들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만 19세 이상(1995년 1월 1일 이전 출생) 성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의 가공과 채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변수의 측정’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조사는 2014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명지동과 녹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와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본 조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¹⁰⁾

1) 조사 지역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면접조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조사대상이 되는 지역을 정하는 문제였는데, 이는 수립된 가설의 내용을 감안하여, 연구가 주목하는 독립변수가 충분한 변량을 갖게 하고, 그 밖의 영향요인들은 비교적 균질적이게끔 지역을 선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역들이 연구모형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특성 면에서 두드러져야 하지만, 여타 통제변수에 해당하는 특성 면에서는 균질적인 양상을 보이도록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부산광역시의 자치구·군 중 이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이며, 전국의 자치구·군 중 11번째로 높은 이주민 비율을 보인다. <부록 1>의 이주민 현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기준 이주민 비율이 전국적으로 3.1%인데 반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8%에 달한다.¹¹⁾ 또한, 부산광역시 전체의 23.6%를 차지할 만큼 넓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 면적의 46.5%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며, 아울러 농지, 임야, 공업단지 등을 고려하면 면적에 비해 상당히 좁은 생활공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구에 비해 높은 이주민 비율로 인해 생활공간에서 이주민과의 접촉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둘째,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1978년 2월 15일 대저1·2동, 가락동, 명지동 일대가 부산에 편입

10)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추석연휴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는 약 2주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현지의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지역의 각종 단체 대표들의 도움을 받았다.

11) 2014년도 안전행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보다 이주민 비율이 높은 자치구·군은 서울 영등포구(15.2%), 서울 금천구(11.6%), 서울 구로구(10.6%), 경기 안산시(10.5%), 경기 시흥시(9.8%), 충북 음성군(9.5%), 경기 포천시(9.2%), 서울 중구(8.9%), 전남 영암군(8.9%), 충북 진천군(8.0%) 등이다. 익명의 심사자는 이렇게 이주민 비율이 높은 자치구·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사례로 선택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한데, 연구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대표사례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되었고, 1989년 1월 1일 강동동, 녹산동, 천가동 일대가 편입되어 자치구로 승격하였다. 부산으로 편입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는 도시화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현재까지도 1차 산업 특히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다.¹²⁾ 특히 총 143개의 자연마을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4년 6월에 실시된 동시지방선거에서 평균 58.6%의 투표율¹³⁾을 보이는 등,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산업단지 조성, 부산신항만 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인근 지역과 함께 각종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이다. 개발계획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 지가의 상승 등 주민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동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상과 같은 특성들로 인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1990년대까지 유지된 공동된 지역문화와 역사성, 산업구조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수립·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주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최소한으로 인접한 지역 내에서 최대유사체계(most similar system) 분석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2) 표본 특성

조사표본의 추출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을 통해 얻은 2014년 7월까지의 지역주민 현황을 기준으로 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표집하는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표 2〉 최종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06	52.2	연령	20대	64	16.2	거주 지역	대저1·2동	89	22.5
	여자	189	47.8		30대	82	20.8		강동·가락·천가	62	15.7
	소계	395	100.0		40대	98	24.8		녹산동	81	20.5
사무직/공무원	79	25.4	50대 이상		151	38.2	명지동		163	41.3	
직업 / 직종	노무직/생산직	17	5.5	소계	395	100.0	소계	395	100.0		
	교육/기술/전문	52	1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4	6.8	종교	천주교	26	7.9
	농업/자영업	92	29.6		고졸	146	41.5		개신교	73	22.2
	주부	46	14.8		전문대졸	53	15.1		불교	103	31.3
	학생	19	6.1		대졸(재학)	118	33.5		기타	8	2.4
	무직	6	1.9		대학원 이상	11	3.1		무교	119	36.2
	소계	311	100.0		소계	352	100.0		소계	329	100.0

12) 대저1동은 쌀, 화훼, 배추, 토마토 등, 대저2동은 토마토, 쪽갓, 상추 등, 강동동은 화훼, 깻잎, 오이, 토마토, 쌀 등, 명지동은 대파, 김 등, 가락동은 쌀과 화훼, 녹산동은 미나리, 감 등, 천가동은 쌀, 유자 등과 어업생산물 등의 특산물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부산광역시 강서구, 2013a).

13)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기준, 전국평균 투표율 56.8%, 부산평균 투표율 55.6% 등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검색일 2014. 10. 10.).

총 431명의 지역주민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는 데이터 입력(coding) 이후, 무응답이 많은 케이스, 이른바 ‘줄 응답’과 같은 무성의한 응답을 포함한 케이스 등을 파기하는 데이터 클리닝(cleaning)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395개의 표본을 얻었으며, 이들 최종 표본의 특성은 위의 <표 2>와 같다.¹⁴⁾

또한, 소득수준은 응답자의 월평균소득을 조사하는 방법 대신,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응답자 가구의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을 계산하였다.¹⁵⁾ 최종 표본의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를 확인한 내용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약 3,998,100원으로 집계되었고, 평균 가구원 수는 약 3.61명이었으며,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은 약 1,163,700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록 2> 참조).¹⁶⁾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문항들을 토대로 설문지를 재구성하고, 대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측정되었다. 조사문항들은 유럽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 모니터링 센터(EUMC: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발표 자료(EUMC 2005)를 통해 확인한 Euro-barometer와 European Social Survey 문항들을 포함하였고, 황성욱 외(2014), 안상수 외(2012), 황정미(2010)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총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⁷⁾

본 연구의 조사문항은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는데,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선별한 조사문항들을 대상으로 지수화를 시도한 황성욱 외(2014)의 연구결과에서 추출된 7개의 문항을 문화적 차이에 관한 태도 영역에 인용하였고, Euro-barometer와 European Social Survey 문항을 토대로 법적 지위에 관한 태도 영역의 8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경제 활동에 대한 태도 영역은 집단위협이론에 입각해 이주민의 존재와 활동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지를 묻기 위해 각각 5개와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영역은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가 정치참여의 유형을 밝힌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의

14) 연령의 경우, 설문지에는 출생년도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표에 제시된 결과는 이를 계산하여 범주화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3.54세(최저 20세, 최고 83세)로 집계되었다.

15) 통상 실질적인 응답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파악해야만 한다. 하지만, 조사시간과 응답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월평균 가처분소득에 최대한 가까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을 계산하기로 하였다.

16) 통계청이 2014년 8월 22일 발표한 2/4분기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집계액은 4,152,171원이었다(통계청 홈페이지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 발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1/index.board?bmode=read&aSeq=329330, 검색일 2014. 10. 14.).

17) 각 문항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이른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한 5점 척도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엄밀하게 리커트 척도는 서열척도(ordinal scale)에 해당하지만, 통상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등간(interval)척도로 간주하는데, 이를 통해 측정치 간의 가감이 가능하고,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통계기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맞는 정치참여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묻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 즉 설문조사의 각 문항들은 통계적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총 34문항의 응답에 대한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의 결과, 응답결과에서는 총 24개 문항을 포함하는 5개의 요인이 추출¹⁸⁾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⁹⁾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5개 요인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한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최초 모형은 간명적합지수(parsimony fit index)를 제외한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부록 3> 참조). 모형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참고하여 의도한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4개의 문항²⁰⁾을 추가적으로 삭제하여²¹⁾ 얻은 수정모형에서는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어 구인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잠재요인에 대한 문항들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모두 0.5 이상의 높은 적재치와 유의미성이 확인되어 최종모형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결과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²²⁾의 확인, 복합요인 신뢰도(composite factor reliability: CR) 검증²³⁾을 실시한 결과, 두 검증값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부록 4> 참조).

검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상의 20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으로 응답자의 태도 점수를 측정하였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되는 지역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의 변량은 <부록 5>와 같다.

18) EFA의 결과, 제거된 문항은 ‘이주민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에 찬성한다’, ‘외국인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꺼려지지 않는다’, ‘결혼이주 가정은 한국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향(외국)에 있는 부모나 가족도 보살펴야 한다’, ‘우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조건을 완화해 주어도 좋다’,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합법적 이주민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이주민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이 설립한 회사나 영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 ‘이주민의 창업을 지원하는 세제혜택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 ‘내가 지지하는 귀화외국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 총 10문항이었다.

19) EFA의 KMO 수치는 0.909로 확인되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6886.684(df=561)$ 로 0.001%에서 유의미하기에 적합한 도구로 판단된다.

20) CFA에 의해 제거된 문항은 ‘한국인에게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근로자를 보면 돕고 싶다’,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주민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 반발하는 것은 불편하다’, ‘귀화외국인의 투표권은 인정하지만,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등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등, 총 4문항이었다.

21) 잠재요인 간의 단일차원성 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요인과의 수정지수가 10이상인 문항들을 삭제하였다(Segars 1997; 박재진 외 2006, 71에서 재인용).

22) Cronbach's α 값은 통상 신뢰도 즉, 항목들의 내적일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며, ‘0.7 이상’이 기준이 된다.

23) 복합요인 신뢰도 검증(CR)은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해당 변수의 성격을 표현하기에 충분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각 잠재요인 별로 ‘요인적재치의 합² / (요인적재치의 합² + 측정오차 분산의 합)’으로 계산되며, 측정오차 분산은 ‘1 - 요인적재치²’으로 계산되고, CR의 기준치는 ‘0.7 이상’이다(Segars, 1997; 박재진 외 2006, 71-72에서 재인용).

2) 독립변수

종속변수인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에 투입될 변수들은 선행연구와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통제변수의 역할을 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독립변수로서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특성 등이다. 통제변수의 역할을 수행할 변수는 질적(명목)척도로 측정된 성별, 교육수준(최종학력), 종교, 직업 등과 양적(등간, 비율) 척도로 측정된 연령, 소득(만원) 등이 있으며,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가변수(dummy)화 하여 사용하고, 양적 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그대로 사용된다.

첫 번째 독립변수로 주목한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은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한 5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치의 평균을 필요성 점수로 측정하여 사용한다. 각 문항은 이주민의 범주로, ‘노무직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전문직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자영업자’, ‘외국인 사업가’ 등이 응답자의 지역(동)으로 이주해 오는 것을 원하는지를 물었으며, 필요성 점수의 변량은 <부록 6>과 같다.²⁴⁾

두 번째 독립변수로 주목한 지역 변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7개의 행정동을 4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대저1·2동, 강동·가락·천가동, 녹산동, 명지동 등으로 가변수화 하여 사용한다(<부록 1>의 지역구분 참조). 먼저, 구분된 각 지역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대저1·2동은 강서구 지역이 부산에 편입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행정적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는 ‘혼합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동·가락·천가동은 60% 이상의 토지가 농·축산업에 사용되는 ‘1차 산업형’으로 볼 수 있다. 녹산동은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낮으며, 제조업 위주의 ‘2차 산업형’으로 볼 수 있고, 명지동은 면적은 가장 좁지만,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도 많지만, 3차 산업 종사 비율도 높아 3차 산업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혼합형’으로 볼 수 있다(<부록 7>, <부록 8> 참조).²⁵⁾

다음으로, 각 지역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녹산동 지역은 2000년 이후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부산과학산업단지(지사), 화전지방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어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미음, 강서산업단지 등의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명지동 지역은 2001년부터 녹산동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주거단지인 명지신도시(이른바 오션시티)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후 2004년 설치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배후주거지역으로 선정, 인천의 송도, 청라에 이어 3번째 국제신도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24) 5개 문항 응답치에 대한 EFA 결과, 1개의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고, KMO 수치는 0.842,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1415.964(df=10)$ 로 0.001%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Cronbach's α 값도 0.915로 확인되어, α 와 KMO 값 모두 ‘0.7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므로 필요성 점수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도구로 판단할 수 있다.

25) 지역의 산업구조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산업별 부가가치액 비율, 산업별 산출액 구성비율, 취업자 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통계치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동레벨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동별 산업별 토지사용과 산업별 사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를 1차 산업형, 2차 산업형 등으로 조작하였다. 또한, 강동·가락·천가 지역과 명지동 지역에서는 산업별 사업체수와 농가 및 농가인구수를 함께 고려했는데, 이는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농민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표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별 개발진행 내용 정리(2014년 현재)

사업명	위치 (법정동)	시기	내용 및 효과	추진기관	지역 (행정동)
미음일반산업단지	미음동	2014년 완공예정	산업단지조성으로 2차 산업 육성	부산진해경자청	녹산동
생곡일반산업단지	생곡동	2015년 완공예정	산업단지조성으로 2차 산업 육성	부산진해경자청	녹산동
거화일반산업단지	지사동	2015년 완공예정	산업단지조성으로 2차 산업 육성	부산진해경자청	녹산동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미음· 녹산동	2017년 완공예정	물류기지조성으로 2·3차 산업 육성	부산광역시	녹산동
서부산유통단지	대저동	2014년 준공	물류기지조성으로 2·3차 산업 육성	부산진해경자청	대저1·2동
명지국제신도시(1단계)	명지동	2015년 완공예정	배후주거지조성으로 인구증가 및 3차 산업 증가	부산진해경자청, 부산광역시	명지동
에코델타시티	대저· 강동동	2018년 완공예정	친수공간조성으로 3차 산업 증가	부산광역시	대저1·2동

출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bjfez.go.kr>),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강서구
구정백서(2013) 등에서 재구성

대저1·2동 지역은 기존의 행정중심지 기능과 교통의 요충지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부산유통 단지 등의 물류산업 개발이 진행 중이고, 부산광역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건립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반면, 강동·가락·천가동 지역은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과 중첩되는 유사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지만, 개발계획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은 계획의 단계에만 머물고 있으며, 이주민 관련 개발계획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앞서 수립된 <가설 3>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1차 산업형 지역인 강동·가락·천가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개발계획의 측면에서는 이주민 관련 계획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 2차 산업형 녹산동지역과 혼합형 지역인 대저1·2동 지역과 명지동 지역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강동·가락·천가동 지역에 비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V. 분석 결과

이상과 같이 측정된 각 변수들을 이용하여,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와 사회·인구론적, 사회경제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모형 1], 이주민 필요성에 대한 점수와 지역 변수를 각각 추가한 [모형 2-1]과 [모형 2-2], 이주민 필요성에 대한 점수와 지역 변수를 모두 추가한 [최종 모형] 순의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상관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등간척도 이상의 수준으로 측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연령,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이주민 필요성에 대한 점수 등의 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부록 9> 참조).²⁶⁾

회귀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는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독립변수로서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 점수와 지역 변수 등이다.²⁷⁾ 등간척도 이상의 수준으로 측정된 연령과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필요성 점수 등은 그대로 투입되었고,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은 성별은 여성을 기준으로, 지역은 명지동 지역을 기준으로 각각 가변수화 하여 투입하였다. 다만, 통제변수이자 <가설 1>에 관련된 독립변수로 투입된 교육수준 변수는 ‘전문대졸 이상’ 집단을 기준으로 가변수화 하여 투입하기로 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결과, 최종학력에 따른 교육수준별 집단 간 태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F=14.45$, $p=0.000$),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태도 점수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각의 집단 간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Scheffe 검증에 의한 사후검증의 결과에서는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집단 간, ‘전문대졸’ 집단과 ‘대졸(재)’ 집단 간, 그리고 ‘대학원 이상’ 집단과 타 집단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부록 10> 참조).

집단 간 차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은 교육수준 별 집단의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졸 이하’의 집단과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으로 병합하여 두 집단 간 태도 점수의 차이를 측정하는 t -test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이 ‘고졸 이하’의 집단보다 태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t=-7.14$, $p=0.000$),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 집단과 ‘전문대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표 4>로 제시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4개의 통제변수들만 투입된 [모형 1]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이 고졸 이하의 집단보다 각각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각각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교육수준 변수만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0.43$, $t=-5.32$, $p=0.000$), 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도 다소 낮게 확인되었다($R^2=0.14$).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수준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주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 점수를 예상한 <가설 1>은 1차적으로 수용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검증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에 대한 준거타당도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6) 추가적인 다중공선성에 대한 진단은 이후 최종회귀모형의 잔차분석(residual analysis)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검증값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다.

27) 종교와 직업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종교별, 직업별 각 집단의 표본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극단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무응답에 의한 결측치가 상당수 존재하여 회귀모형에 투입되는 변수의 수에 비해 설명력(R^2)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실제로 두 변수를 가변수화 하여 투입한 회귀모형에서 이후 제시될 [최종모형]과 비슷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2=0.42$).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1		모형 2-2	
	계수(표준오차)	β	계수(표준오차)	β	계수(표준오차)	β
상수	3.52*** (0.16)		2.38*** (0.18)		3.51*** (0.16)	
남자D	0.03 (0.07)	0.03	-0.07 (0.06)	-0.06	0.04 (0.07)	0.03
연령	-0.00 (0.00)	-0.02	-0.00 (0.00)	-0.06	0.00 (0.00)	0.03
저학력D	-0.43*** (0.08)	-0.35	-0.27*** (0.07)	-0.22	-0.40*** (0.08)	-0.33
가구원당 소득	0.00 (0.00)	0.07	0.00 (0.00)	0.07	0.00 (0.00)	0.06
필요성 점수			0.42*** (0.04)	0.51		
대저1·2동					-0.16* (0.09)	-0.11
강동·가락·천가동					-0.36*** (0.09)	-0.23
녹산동					0.12 (0.16)	0.04
<i>N</i>	264		264		267	
<i>F-value</i>	10.26***		31.64***		8.86***	
<i>R</i> ²	0.14		0.38		0.19	
ΔR^2			0.24		0.05	

* $p < 0.1$, ** $p < 0.05$, *** $p < 0.0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거의 모든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방향이 검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주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보다 확대된 교육기회와 다양한 직·간접경험을 통해 보편적인 가치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증가 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도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²⁸⁾

두 번째로,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 점수가 투입된 [모형 2-1]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가구원당 소득변수 등은 태도 점수와의 상관관계의 방향성과 계수의 크기에서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성별 변수는 상관관계의 방향성이 변화하였으며, 교육수준 변수의 계수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변수의 방향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성별 집단과 필요성 점수의 상호작용(interaction) 효과를 예상하여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회귀모형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지 못하였다.²⁹⁾ 또한 교육수준 계수의 감소는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 점수도 교육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최근 진행되는 이른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의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28) 종속변수와 각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의 방향성도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29)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0.38로 확인되어 [모형 2-1]의 설명력과 차이가 없었으며,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하지 않았다($b=0.04$, $t=0.46$, $p=0.648$).

[모형 2-1]의 결과에서는 필요성 점수와 태도 점수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b=0.42$, $t=10.06$, $p=0.000$), 모형의 설명력이 [모형 1]에 비해 크게 향상($\Delta R^2=0.24$)된 것으로 확인되었다($R^2=0.38$). 결과적으로, 거주지역에 있어서 이주민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주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이 클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 점수를 예상한 <가설 2>는 1차적으로 수용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변수가 투입된 [모형 2-2]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변수를 제외한 모든 통제변수가 [모형 1]과 비교해 관계의 방향성과 계수의 크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연령 변수의 경우에는 관계의 방향성이 역전되어 나타났는데,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강동·가락·천가동 지역에서 연령과 지역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R^2=0.25$, $b=-0.03$, $t=-4.15$, $p=0.000$). 이는 강동·가락·천가동 지역 응답자의 연령 분포가 다른 지역 응답자들과 차이가 남을 의미하며,³⁰⁾ 해당 지역이 ‘1차 산업형’으로 분류된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농촌사회의 고령화’ 등의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2-2]의 결과에서는 [모형 1]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Delta R^2=0.05$), 설명력이 약간 상승하였고($R^2=0.19$), 일부 지역 간 태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는 명지동이 대저1·2동과 강동·가락·천가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녹산동은 명지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유의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 산업형’으로 분류된 강동·가락·천가동 지역 응답자의 태도 점수가 ‘2차 산업형’과 ‘혼합형’으로 분류된 지역에 비해 낮게 확인되었고, 이는 2·3차 산업 기반 지역의 보다 긍정적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예상한 <가설 3-1>이 1차적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주민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실행이나 수립의 영향을 예상한 <가설 3-2>도 부분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가설의 최종적 수용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와 다중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5>와 같은 최종회귀모형이 산출되었다. 모형에 대한 설명에 앞서, 회귀모형 자체에 대한 진단을 해보면, 첫째,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모든 공차가 ‘0.69 이상’이고, 모든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46 이하’이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잔차의 평균값은 0으로 확인되었고(min -1.23, max 1.40, s.e. 0.48), <부록 11>과 같이 정규 확률도표(q-q plot)와 히스토그램을 통해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표준예측값(standardized predicted value: ZPRED)과 표준잔차(standardized residual: ZRESID)의 산포도를 통해 잔차의 등분산성과 독립성을 확인하였다.³¹⁾ 잔차 분석을 통한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최종회귀모형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0) 지역별 연령의 차이를 확인한 분산분석(ANOVA)의 결과($F=3.827$, $p=0.010$), 강동·가락·천가동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7.95세로, 녹산동(평균 41.58세)과 명지동(평균 42.54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저1·2동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4.07세로 확인되었지만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31) Durbin Watson' d 는 1.77로 확인되었다.

먼저 최종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로 확인되었다($R^2=0.41$).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 점수, 지역 변수 등의 다중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각 변수들의 변화에 의해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F=22.05$, $p=0.000$).

〈표 5〉 최종회귀모형: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최종모형				
	계수	<i>se</i>	β	공차	<i>VIF</i>
상수	2.39***	0.18			
남자D	-0.07	0.06	-0.05	0.92	1.08
연령	-0.00	0.00	-0.02	0.76	1.32
저학력D	-0.28***	0.07	-0.23	0.69	1.46
가구원당 소득	0.00	0.00	0.07	0.96	1.04
필요성 점수	0.41***	0.04	0.49	0.88	1.14
대저1·2동	-0.04	0.08	-0.03	0.81	1.23
강동·가락·천가동	-0.22**	0.08	-0.14	0.80	1.25
녹산동	0.25*	0.14	0.09	0.88	1.14
<i>N</i>	264				
<i>F-value</i>	22.05***				
R^2	0.41				

* $p < 0.1$, ** $p < 0.05$, *** $p < 0.01$

회귀계수의 방향에 의거하여 결과를 해석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젊은 사람일수록, 최종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거주지역에 이주민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거주지역 가변수의 회귀계수를 근거로 판단할 때 녹산동 > 명지동 > 대저1·2동 > 강동·가락·천가동 등의 순으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변수 중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교육수준 ($b=-0.28$, $t=-3.94$, $p=0.000$), 거주지역에 이주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b=0.41$, $t=9.61$, $p=0.000$)이며, 각각의 지역 중 명지동과 녹산동($b=0.25$, $t=1.77$, $p=0.08$), 명지동과 강동·가락·천가동($b=-0.22$, $t=-2.61$, $p=0.010$)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이상의 회귀모형에 의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 점수를 예상한 <가설 1>,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이 클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 점수를 예상한 <가설 2>, 지역의 산업구조와 개발계획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의 차이를 예상한 <가설 3>은 모두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녹산동, 명지동, 대저1·2동 지역 모두에서 강동·가락·천가동 지역보다 긍정적인 태도 점수가 확인되었으므로 <가설 3-1>과 <가설 3-2>도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이 일정하다고 보았을 때)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동)별 차이는 해당지역의 산업구조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이주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이른바 ‘교육의 영향’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 대두되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의 점진적인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갈등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다문화 사회’나 ‘다민족 국가’로의 이행이 불가피할 경우, 이주민과 지역주민을 보다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주민이 정착할 사회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가 방안마련의 일차적 열쇠라고 보았고, 그러한 지역주민이 가지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해당 요인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 영향요인에 집중했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제도적 요인으로서 지역 특성에 주목하였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와 지역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거주지역의 특성은 이주민에 대해 느끼는 필요성과 함께,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가 발견한 사실과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 응답자가 가지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포용적이고 관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주민의 지역에 있어서 이주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주민에 대해 더 포용적이고 관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1차 산업에 기반한 지역에 비해 2·3차 산업에 기반한 지역의 응답자가 보다 포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산업구조를 2·3차형으로 변화시키거나 이주민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는 지역의 응답자가 보다 포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지역의 산업구조와 개발계획 등으로 한정되기는 하였지만, 거주지역의 특성이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이론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즉, 지역주민 개인이 느끼는 이주민에 대한 선호(혐오)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여부의 선택 등은 제도적 환경으로 기능하는 지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부산광역시 녹산동과 명지동 등의 지역은 과거 1차 산업에 기반한 지역이었으나, 지역개발계획 등에 의해 2·3차 산업에 기반한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의 개발계획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2차 산업에 기반한 지역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3차 산업에 기반한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증가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지역주민들은 노동수요의 증가와 소비자 증가에 대한 기대에 의해 점차 유입되는 이주민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광역시 명지동과 녹산동의 지역주민들은 늘어나기 시작한 이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로 채택되어 영향이 검증된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하면, 지역주민은 이주민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며, 결국 두 집단 간의 상호의존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과 이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한 의존성이며, 그러한 상호의존성이 발생하는 데에는 지역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²⁾ 만약,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상황을 예방하고,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한 사회나 국가에 잘 통합되기를 원한다면, 이주민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참여를 통해 이주민이 해당 사회에 대한 영향력있는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두 집단 간의 통합은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상호의존성, 이주민의 참여 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앞서 언급했던 접촉이론의 시각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교류와 상호의존성의 영향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관리자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여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한 설동훈(2013)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 협동학습, 정보교류 등을 통해 인종적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파릴로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Parrillo 2010, 143-148).

반면, 본 연구의 결과가 매우 특수한 상황에 의한 것으로 비판될 수도 있다. 즉, 본 연구의 이론적 가정과 분석 결과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이 가지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 한정된 것이라는 비판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사와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한국의 상황에 일반화되기 힘든 한계는 명백하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주민들이 점증하고 있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해 온 특이한 사례의 지역주민들에게서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실마리로 두 집단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유익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쉽게 일반화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만큼 가치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명백한 한계는 ‘다문화적’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특수한 사례를 통해 이주민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갈등·통합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적절한 시도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주목한 조사와 연구는 이주민 거주 분포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이

32) 이러한 해석은 국제정치학에서 국가 간 통합을 논의하는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이 제시하는 ‘상호의존성의 심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민 관련 정책의 개발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김해시 동상동과 서상동 일대의 ‘아시아 다문화 거리’ 조성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상황의 변화 등의 ‘특수한’ 사례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앞서 언급한 상황에 대한 보다 적절한 대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본다.

참고문헌

- 강준혁·남진열. (201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의 인식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1: 85~104.
- 고든 알포트(Allport, Gordon W.) 저·이원영 역. (1993). 『편견의 본질』. 서울: 성원사.
- 고유미·이정윤. (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7(1): 1~16.
-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혜순. (2014). 결혼이민여성의 혼인과 ‘다문화정책’: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물이민적·물성적 결합, 『한국사회학』 48(1): 299~344.
- 김혜순·이시철. (2014). 국가별 관심 편중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측정: 대구 달서구 사례의 실증 분석, 『지방행정연구』 28(1): 89~114.
- 노성훈. (2013).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3): 151~184.
-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조영기·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박재진·이정교. (2006). 온라인 쇼핑물 이미지 측정 지수개발 및 타당성 검증, 『광고연구』 73: 61~79.
-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3a). 『2013 구정백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 _____. (2013b). 『제29회 강서구통계연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 빈센트 파릴로(Parrillo, Vincent N.) 저·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역. (2010). 『인종과 민족관계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설동훈. (2013). 중소기업관리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분석, 『지역사회학』 14(2): 203~229.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양계민·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영삼·남성희·윤수경. (2014). 내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2): 424~452.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4(1): 143~192.
- 이현정·안재웅·이상우. (2013).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언론학보』 57(3): 34~57.
- 정자경·박연환. (2012).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도,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 29~52.
- 최 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147~173.
- 최운선. (2007).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황성욱·조윤용·이철한. (2014). 다문화수용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문화수용성 측정 지수 개발, 『분쟁해결연구』 12(3): 167~196.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 Berry, John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_____.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9: 697~712.
- Blalock, Hubert M.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EUMC. (2005).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Online. Available HTTP: http://fra.europa.eu/sites/default/files/ra_uploads/146-EB2005-summary.pdf(August 11).
- Hochman, O., R. Rajjman and P. Schmidt. (2008). National Identity and Exclusionary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in Two Ethno-National States: Germany and Israel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nual conference of the ISPP, Paris.
- Holley, E. H. and L. H. Vicki. (2009). National Identity: Civic, Ethnic, Hybrid, and Atomised Individuals, *EUROPE-ASIA STUDIES*, 61(1): 1~28.
- King, D. R. and D. Wheelock. (2007). Group Threat and Social Control: Race, Perceptions of Minorities and the Desire to Punish, *Social Forces*, 85(3): 1255~1280.
- Markert, John. (2010). The Changing Face of Racial Discrimination: Hispanics as the Dominant Minority in the USA - a New Application of Power-Threat Theory, *Critical Sociology*, 36(2): 307~327.
- Quillian, Lincoln. (1995).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4): 586~611.
- Segars, A. (1997). Assessing the unidimensionality of measurement: A paradigm and illustration within the context of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Omega*, 25(1): 107~121.
- Sniderman, P. M., L. Hagendoorn and M. Prior. (2004). Predisposing Factors and Situational Triggers: Exclusionary Reactions to Immigrant Minor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1): 35~49.
- Tajfel, H. and J. C. Turner.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and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33~47). Monterey, CA: Brooks-Cole.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ertovec, Steven and S. Wessendorf eds. (2010). *The Multiculturalism Backlash: European discourses, policies and practices*. New York, NY: Routledge.

김태완(金泰完): 부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비교정치(선거 및 정당정치)이고, 최근에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선거에서의 영호남 지역주의 투표성향에 대한 분석: 1990년대 이후 국가레벨 선거를 중심으로’(2012), ‘19대 총선 집합자료를 이용한 당선 가능성 예측과 투표율의 상관관계 분석’(2012) 등이 있다 (neatlifepusan.ac.kr).

서재권(徐載權): 미국 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주리주 Truman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비교정치/정치경제이고, 정치제도의 경제적·정책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Corporate governance under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s’(Public Choice 2012), ‘Globalization, Democracy and State Autonomy’(KJIS, 2014), ‘선거제도의 경제적 효과: 기업 거버넌스와 경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21세기정치학회보』 2014) 등이 있다 (jksuh@pusan.ac.kr).

〈부록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이주민 현황

구분	합계	주민등록상 비율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혼인 귀화자	기타 귀화자	이주민 자녀
전국	1,569,470	3.1	538,587	149,764	80,570	233,265	217,002	90,439	55,639	204,204
부산 강서구	5,586	8.0	4,481	176	5	320	230	102	18	254
대저1동	210	2.3	108	25	0	16	14	11	0	36
대저2동	237	2.6	126	20	3	18	26	13	2	29
대저1·2동	447	2.5	234	45	3	34	40	24	2	65
강동동	204	2.9	115	18	0	11	18	13	2	27
가락동	133	4.8	79	12	0	10	8	6	1	17
천가동	67	2.2	11	9	0	9	6	12	1	19
강동·가락·천가	404	3.2	205	39	0	30	32	31	4	63
녹산동	4,459	38.5	3,979	53	1	231	101	23	6	65
명지동	276	1.0	63	39	1	25	57	24	6	61

출처: 안전행정부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에서 재구성함

〈부록 2〉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만원)	272	0	5,000	399.81	440.41
가구원 수	329	1	6	3.61	1.16
가구원당 소득(만원)	270	0.00	1,000.00	116.37	108.15

〈부록 3〉 CFA 모형의 적합도 평가

모형	CMIN/DF	RMR	RMSEA	GFI	AGFI	NFI	TLI	CFI	PNFI	PCFI
기준지	≤ 3	≤ .08	≤ .08	≥ .90	≥ .90	≥ .90	≥ .90	≥ .90	≥ .50	≥ .50
최초모형	3.666	.070	.082	.811	.770	.834	.858	.873	.747	.781
수정모형	2.603	.052	.064	.902	.868	.909	.928	.941	.742	.768

〈부록 4〉 요인별 최종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최종 문항	요인 적재치	Cronbach's α	CR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	국내 이주민이 따로 모여 자신의 음악이나, 무용·공연을 즐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63	.787	.785
	대중교통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 꺼려진다.	.72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이주민은 한국과는 다른 자신의 문화나 생활방식을 피해야 한다.	.66		
	이주민은 수동적인 존재이다.	.75		
사회문제와 변화에 대한 태도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69	.816	.809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이주민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69		
	한국이 이주민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이주민이 한국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62		
	이주민이 늘어날수록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진다.	.77		
법적 지위에 대한 태도	이주민의 거주가 늘어나면 우리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61	.827	.934
	이주민도 한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79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88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질병,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63	.826	.857
	이주민으로 인해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84		
	이주민으로 인해 한국인의 임금수준이 낮아진다.	.81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이주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80	.912	.917
	이주민이 한국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하다.	.83		
	이주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불편하다.	.86		
	이주민이 한국의 정치나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불편하다.	.89		
	이주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 기자 등과 접촉하는 것은 불편하다.	.66		
	이주민이 한국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편하다.	.89		

〈부록 5〉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이주민에 대한 태도	395	1.25	5.00	3.24	0.61

〈부록 6〉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 점수(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이주민 필요성	392	1.00	5.00	2.87	0.73

〈부록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목별 면적 현황 † (단위: km², %)

구분	전체 면적	제외 면적	가용토지 면적	농축산업		1차산업		2차산업		대지(垵地)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대저1·2	47.05	7.09	39.96	18.91	47.3	18.91	47.3	0.04	0.1	3.11	7.8
강·가·천	62.04	20.39	41.65	26.48	63.6	26.50	63.6	0.00	0.0	2.35	5.6
녹산	56.85	27.45	29.39	9.56	32.5	9.63	32.8	8.15	27.7	2.27	7.7
명지	15.67	2.70	12.98	7.63	58.8	7.63	58.8	0.00	0.0	1.56	12.1
전체	181.61	57.63	123.98	62.60	50.5	62.68	50.6	8.20	6.6	9.30	7.5

출처: 강서구 통계연보(부산광역시 강서구 2013b) 지목별 토지 현황에서 재구성함

† '제외 면적'은 임야와 잡종지 면적을 합한 것이고, '농축산업 면적'은 논, 밭, 과수원, 목장이 포함되었다. '1차 산업 면적'은 '농축산업 면적'에 염전, 양어장 면적을 합한 것이고, '2차 산업 면적'은 공장용지 면적을 각각 계산하였다.

〈부록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업별 사업체 및 농가 현황 † (단위: 개, 명, %/호, 명)

구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총 사업체수	총 종사자수	농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농가	농가인구
대저1·2	2 (0.06)	8 (0.04)	1,370 (41.34)	9,349 (48.01)	1,942 (58.60)	10,114 (51.94)	3,314	19,471	1,748	5,282
강·가·천	2 (0.15)	18 (0.20)	540 (39.47)	3,196 (35.23)	826 (60.38)	5,858 (64.57)	1,368	9,072	2,056	6,554
녹산			1,852 (57.30)	46,316 (86.53)	1,380 (42.70)	7,208 (13.47)	3,232	53,524	750	2,093
명지	4 (0.31)	43 (0.77)	143 (10.98)	989 (17.81)	1,155 (88.71)	4,522 (81.42)	1,302	5,554	1,161	3,648
전체	8 (0.09)	69 (0.08)	3,905 (42.37)	59,850 (68.31)	5,303 (57.54)	27,702 (31.62)	9,216	87,621	5,715	17,577

출처: 강서구 통계연보(부산광역시 강서구 2013b)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에서 재구성함

† '1차 산업'은 농업, 임업, 어업이, '2차 산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등의 업종을 합산한 것이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등, 그 외 모든 사업체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사업체 종사자 외에 농가인구를 추가하여 1차 산업 종사자수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농가와 종사하는 수를 제시하였다.

〈부록 9〉 등간척도 이상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Pearson's R)

구분	태도 점수	연령	가구원당 소득	필요성 점수
태도 점수	1.00			
연령	-0.14***	1.00		
가구원당 소득	0.10	-0.08	1.00	
필요성 점수	0.53***	0.04	0.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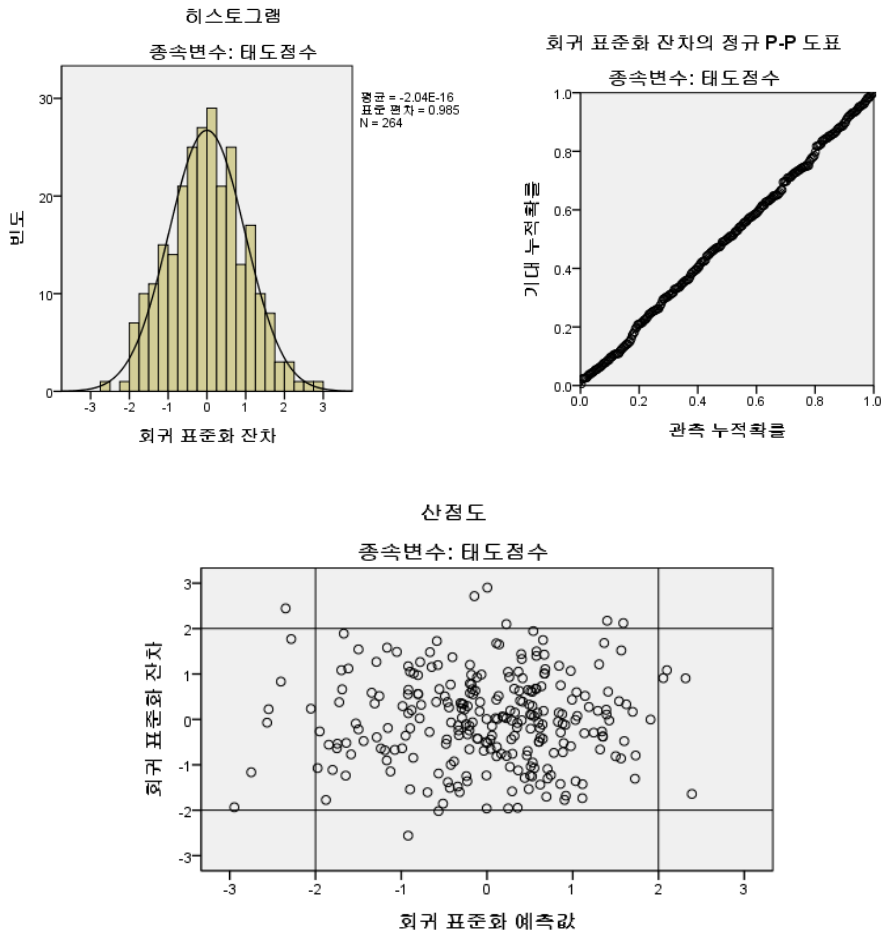
***p < 0.01

〈부록 10〉 교육수준별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점수의 비교(ANOVA, t-test)

교육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중졸 이하	24	2.92 a	0.63	14.45***	a < d, e b < d c > a d > a, b
고졸	146	3.10 b	0.56		
전문대졸	53	3.38 c	0.53		
대졸(재)	118	3.57 d	0.58		
대학원 이상	11	3.46 e	0.61		
합계	352	3.30	0.61		
교육수준	N	평균	표준편차	t	평균차
고졸 이하	170	3.07	0.57	-7.14***	-0.44
전문대졸 이상	182	3.51	0.57		

***p < 0.01

〈부록 11〉 회귀진단(Regression Diagnostics)



Abstract

**Determinants of Natives' Attitude toward Immigrants:
examining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future of Korea**

Kim Tae Wan
Suh, Jaekw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future of Korea by examining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have a systemic influence on natives' attitude toward immigrants. We chose an autonomous district of Gangseo-gu, Busan Metropolitan City as the representative case, and conducted a survey, based upon the idea of most similar research design. Analyzing the survey data, we found two things: 1) natives' attitude toward immigrants gets positive as they live in secondary or tertiary industry area; 2) natives become more receptive to immigrants as they have a town development plan toward secondary or tertiary industry area. These findings imply 1) that a certain level of interdependence between the natives and the immigrations are indispensable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2)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town development plan of the areas have a systemic influence on the occurrence of interdependence between the natives and the immigrants.

Key Words: immigrants, multicultural society, town development plan,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Gangseo-gu of Busan Metropolitan City

